

이해관계자

군인권센터



대한민국
국제연합 보편적정례검토 제출자료
보편적정례검토 제14차 실무회의
2012년 10월 22일 - 11월 5일

연락처

군인권센터

주소: 150-037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6 여성미래센터 303호

홈페이지: www.mhrk.org

전자우편: mhrk119@gmail.com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2012년 4월 23일

군인권센터 국제연합 보편적정례검토 제출자료

보편적정례검토 제14차 실무회의 (2012년 10월 22일 - 2012년 11월 5일)

가. 배경정보

나. 국제인권법의 이행

ㄱ. 평등과 비차별

ㄴ. 생명, 자유 그리고 개인의 안보에 관한 권리

ㄷ. 신념,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그리고 공적이고 정치적인 삶에 참여할 권리

ㄹ. 사법집행 및 법률의 시행

각 주제별 단락에서 군인권센터는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우려되는 상황을 서술하고 권고안을 굵은 글씨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단락별 권고안은 1차 보편적정례검토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 배경정보

1. 군인권센터(이하 본 센터)는 2009년에 설립된 단체로서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군대 내 인권피해자를 상담하고, 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군내 인권침해 사건을 감시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2008년 당시 군인권센터설립준비모임의 자격으로 1차 보편적정례검토에 참여한 바 있다.

나. 국제인권법의 이행

ㄱ. 평등과 비차별

1. 군대 내에서 성적 지향과 성적체성에 기반한 차별 (권고 23-불수용):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5(계간죄¹⁾)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는 LGBT를 향한 명백한 차별이다²⁾. 제92조의5가 적용된 사건과 제92조의 다른 하위 조항이 적용된 사건을 비교할 때, 제92조의5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³⁾ 또한 시간과 장소, 업무관련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총 4건의 제92조의5가 적용된 사건이 보고되었고, 이 중 3건은 기소되어 처벌되었다. 이성간의 합의된 성적

1) 군형법 제92조의5(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해당조항이 사용한 계간이라는 용어는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고, 본질적으로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편견을 수반한다.

3) 2004년 1월 1일 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군형법 상 추행죄가 적용된 사건은 모두 176건이다. 이 중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적 행위는 4건이었으며, 4건 중 3건은 공판에 회부되어 처벌되었고, 1건은 기소유예되었다. 나머지 172건은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군형법 상 추행죄가 적용된 사례이며, 102건은 처벌, 기소유예 36건, 공소권 없음 6건, 혐의 없음 3건, 처분 미상 25건이다. 이와 같은 적용실태를 보면 군형법 상 추행죄가 적용된 사실 중 98%가 형법 또는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고, 군형법 상 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형법의 강제추행죄를 비친고죄화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행동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동성 간의 행위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것은 부정의하고, 증오와 편견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7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⁴⁾ 그리고 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중 찬성을 한 23개국 중의 하나였다. 정부는 균형법 제92조의5를 폐기하고, LGBT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군인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나. 생명, 자유 그리고 개인의 안보에 관한 권리

2.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수많은 군인들이 구타 및 가혹행위에 고통 받고 있다. 군대 구타 및 가혹행위가 상관에 의해 자행되는 부분에서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해당하는 일종의 고문이다. 구타 및 가혹 행위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해자들이 적절히 처벌되고 있지 못하다.⁵⁾ 많은 피해 군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데, 이는 전역 이후까지도 계속된다. 게다가 이로 인한 자살도 발생하고 있다⁶⁾.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완화하기 위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은 즉각적 의정서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조속한 의정서 가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요구된 바이기도 하다. 정부는 군대 내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선택의정서에 즉시 가입해야 한다.

3. 군대 내에서의 성범죄: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성범죄 건수는 336건이다. 이 중 256건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경우였고, 71건은 군인 상대 범죄였다. 그러나 48%의 사건이 불기소처분 되었다.⁷⁾ 비록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군인복무규율 제25조⁸⁾에 따르면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군대에서의 성폭력은 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재판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인권선언문 제7조에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가 박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구조적인 지원을 군대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군인복무규율 제25조의4를 삭제해야 한다.

다. 신념,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그리고 공적이고 정치적인 삶에 참여할 권리

4. 양심적 병역거부(권고 17, 24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현재 연구중이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총 7,108명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보고되었다⁹⁾. 현재까지 약 800명의

4) 결의안 17/19 “인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A/HRC/RES/17/19)

5) 신학용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구타로 인해 징계를 받은 병사의 수가 07년 3197명, 08년 4144명, 09년 5415명, 10년 5437명으로 매년 늘어났고, 간부는 07년 29명, 08년 44명, 09년 30명, 10년 54명으로 최근 2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육군 간부들 중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여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처벌을 받은 인원은 07년 29명 중 2명(6.9%), 08년 44명 중 4명(9.1%), 09년 30명 중 3명(10%), 10년 54명 중 5명(9.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6)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군대 내 자살자는 75명이었으며 2009년 81명, 2010년 8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에서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2010년 상반기에만 35명의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중 13명은 구타 및 가혹행위, 군대 부적응이 자살의 원인이었다.

7) 김동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총 336건의 성범죄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군대에서 발생했다고 보고되었고, 이중 절반이 넘는 173건이 불기소되었다. 265건의 피해자는 민간인이었으며, 71건의 경우는 군인이 피해자였다.

8) 군인복무규율 제25조(고충처리) ④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9)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집총 혹은 입영 거부자가 7,108명에 이르고, 이 중 6,428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6,405명은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양심수가 복역 중이다. 국제연합은 분명하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¹⁰⁾, 정부들이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한다.¹¹⁾ 그렇지만 정부는 설문조사에서 대체복무제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다고 하여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¹²⁾ 더 나아가 정부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하며, 관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5. **군대 내에서의 사상의 자유와 문화적 삶에 참여할 권리:** 국제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2008년 이래 줄곧 위축되고 있다.¹³⁾ 2008년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¹⁴⁾를 근거로 불온도서 목록¹⁵⁾을 작성하였다. 7인의 법무관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군대에서 불온도서를 금지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¹⁶⁾. 더 심각하게도 시사인의 2011년 11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공군이 19개의 도서를 금서목록에 추가했다. 이런 자의적 금서 지정은 헌법¹⁷⁾과 요하네스버그 원칙 5와 7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사회권규약 제15조가 보장하는 문화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는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와 군인사법 제47조의2¹⁸⁾를 폐기하고, 국방부는 자의적으로 작성된 금서목록을 무효화해야 한다.

6. **군대 내에서의 사상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2012년 1월 31일 청원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모 부대가 부대장 서모 준장 명의로 특정 스마트폰 앱들을 정부 비방, 종북 앱¹⁹⁾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추가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12년 1월 17일 6군단 예하 부대에서도 발생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본 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상황은 악화되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던 중이던 2012년 2월 13일 경부터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의 오원진 여단장이 예하부대 800여명의 군인 스마트폰을 수색영장 없이 검열하였다. 본 센터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추가 진정을 접수하고 이번 집단 인권 유린

10) 일반논평 22 1993년 (CCPR/C/21/Rev.1/Add.4), 인권위원회 결의안 1998/77

11) 최종견해 (CCPR/C/KOR/CO/3), 보편적정례검토 권고 17 (A/HRC/8/40)

12) 2008년 12월 24일 병무청에서 실시한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와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반대가 68.15% 찬성이 28.96%로 반대의견이 많았다.

13) 특별보고관은 보고서 요약에서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하여 사법 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들어 개인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제약이 늘어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14)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유인물·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5) 국방부 지정 불온도서는 '북한의 미사일 전략', '북한의 우리식 문화', '지상에 숭가락 하나',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미군 범죄와 한미SOFA', '소금꽃나무', '꽃 속에 피가 흐른다', '정복은 계속된다', '우리 역사 이야기 1,2,3', '나쁜 사마리아인들', '김남주 평전', '21세기 철학 이야기', '대한민국사', '우리들의 하느님', '세계화의 덫', '삼성왕국의 게릴라들'이다.

16)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보고서, 프랭크 라뤼에 따르면 "특별보고관은 군대 및 병영 내에서 23권의 "불온" 서적을 금지한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2010년 10월 23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특별보고관은 모든 사람은 사상과 의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읽을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특별보고관은 ... 특히 불온서적을 결정하는 명백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에게 그러한 금지를 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7)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8)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나는 꿈수다>, <스마트 촛불>, <스마트 (통일)카드>, <가가 퇴임일 카운터>, <범민련 남측본부>, <North Korea World>, <김정일 퍼즐>, <애국전선> 등 8가지 어플을 종북 찬양 앱으로 지정하고 삭제를 지시하였다.

사태에 대해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개인청원을 하였다. 이 검열은 헌법 제12조의3과 자유권규약 제9조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요하네스버그 원칙 5에 반한다. 정부는 위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을 보완해야 하고, 해당 명령은 취소되어야만 한다.

7. **군인의 정치적 삶에 참여할 권리**: 2012년 2월 6일 대한민국 육군 3군사령부는 군인복무규율 제18조²⁰⁾의 모호한 해석을 근거로 군인들이 특정정당²¹⁾의 국회의원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²²⁾ 문제는 군인이 정부 공무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 중이란 점이다. 2월 6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3군사령부 조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상 군인을 포함해 공무원의 당내 경선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면서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이는 국방부가 군인의 정치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자의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정부는 군인들이 모든 정당의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인복무규율의 관계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ㄷ. 사법집행 및 법률의 시행

8. **자의적 구금 (권고 22, 26 -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가입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3,066명이 넘는 군인들이 사법 절차를 밟지 않고 그들의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 영창처분을 받았다. 이는 헌법²³⁾과 자유권규약 제9조에서 보장하는 자유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들의 구금은 상관의 행정처분에 의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다. 비록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구속을 위해서는 법원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함²⁴⁾에도 불구하고 군인을 영창에 보내는 징계 조치에 대한 권한은 법원이 아닌 군인에게 부여되어 있다²⁵⁾. 이는 헌법과 자유권 규약 제14조에 따르면 법률의 결함이 있는 것이다. 또한,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따르면 이는 고문으로 사려 된다. 모든 자의적 구금은 당장 중지되어야만 하며, 대한민국의 즉각적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함께 군인사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9. **군사법제도**: 자유권 규약 제14조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공평하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빈번히 침해되고 있다. 이는 군사법원이 대법원이 아니라 국방부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심판관이 군사법원 재판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과 군 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²⁶⁾ 정부는 **평화시 군사법원을 폐지하**

20) **군인복무규율 제18조(정치적 행위의 제한)**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

21) 민주통합당

22) 2월 6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6일 3군사령부는 최근 인트라넷에 ‘정당 내 경선에 군인이 참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주간 법규교육 관련 자료를 올렸다. 이 자료는 ‘군인은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의 당직자 선출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23)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4)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5)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5. 병에 대한 징계: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26)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군판사 2인 이외에 심판관 1인으로 구성되며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하며 관할관(해당 부대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해 2명의 심판관이 재판관으로 포함될 수 있다. 재판에서 심판관의 계

고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재판도 일반법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0. 성범죄 관련 조항의 친고죄 조항 폐기 (권고 19 - “관계 조항이 검토될 것이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336건의 성범죄 사건 중 173건이 불기소 처분되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의 60% 가량의 이유가 공소권 없음이었다.²⁷⁾ 이런 높은 불기소 처분 비율은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고²⁸⁾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이다²⁹⁾. 특히, 피해자가 군대에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 친고죄 조항이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여 고소를 취하하는데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의 비친고죄화는 오랫동안 많은 여성운동단체가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군인 소속일 경우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정부는 군형법 제92조의8와 형법 제296조를 개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11.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의 실행 (권고 11 - 수용가능):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³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정부는 행동계획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다. 매우 적은 군인만이 군대 내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³¹⁾ 게다가 인권교육이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질도 보장되지 않는다.³²⁾ 또한, 그 효과도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³³⁾ 근본적으로, 행동계획이 모든 군인이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³⁴⁾ 모든 군인에게 교육이 제공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계급의 군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급이 군판사의 그것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심판관이 사실상의 재판장이 된다. 심판관은 부대의 장교라는 점에서 재판 시 선입견을 갖고 재판에 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27) 김동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총 336건의 성범죄가 발생하였고, 이 중 173건은 불기소되었다. 불기소된 173건 가운데 105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분류되었다.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고, 피해자들이 보통 고소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범죄가 불기소된 것이다.

28) 군형법 제92조의8 (고소)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9) 성범죄 피해자는, 특히 군내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해서,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보다 더 문제적 존재로 취급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30)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군인은 전투와 관련한 과업과 관계하여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에 대해 훈련받아야 할 뿐 아니라 전쟁의 대가를 치루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 직업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또한 인권훈련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31) 교육을 받은 군인의 최고 비율은 겨우 4.75%이다. 201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05년 국방개혁이 추진된 이후 대한민국은 총 3만 3,000명을 감축하여 현역 군인 수는 총 64만 8,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국방부 및 각 군별 인권교육 시행 현황[‘08~’10]의 인권업무 종사자 인권교육 (인권교관 포함)에 따르면 인권교육을 수료한 인원이 08년에 160명, 09년에 257명, 10년에 308명이다. 이 중 의료분야 근무자 교육은 08년 33명, 09년 32명, 10년 59명이 이뤄졌고, 수사분야 근무자는 08년 0명, 09년 40명, 10년 47명이 이뤄졌고, 법무관은 08년 0명, 09년 38명, 10년 37명이 받았으며, 교정분야 근무자의 경우 08년 0명, 09년 35명, 10년 34명이 이뤄졌고, 인권교관은 08년 40명, 09년 33명, 10년 57명이 받았고, 여성고충상담관은 08년 87명, 09년 79명, 10년 74명이 교육을 받았다.

32)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국방부 및 각 군별 인권교육 시행 현황[‘08~’10]의 군 인권교육 체계에 따르면 “각 군은 지휘관 시간 등을 이용, 일일교육은 소대장, 주간교육은 중대장, 월간교육은 대대장, 반기교육은 장관급 이상 지휘관이 각각 실시”한다고 되어있다.

33)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국방부 및 각 군별 인권교육 시행 현황[‘08~’10]의 군 인권교육 체계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병 양성 교육과정, 장교 및 부사관 양성·보수과정에서 실시”한다고 되어있다.

34) 제2차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 전 계급의 군인을 위한 인권훈련에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밝혔다.